

# 복귀 시한에도 꿈쩍않는 전공의... 무더기 고발 사태 오나

### 정부 전공의 대표 집 찾아 업무개시 명령 전달 법적 대응 절차 돌입 전공의들 돌아올 움직임 없어... "강대강 대처 지속 환자들만 피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을 한 광주·전남 전공의들의 사법처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음에도 광주·전남 지역 대부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남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는 한편 최종 복귀시한(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 집을 방문해 업무개시 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대응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가 예고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전체 전공의들에게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의료봉

과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광주지역 상급병원의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아직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그동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한 조치와 다른 형태다. 전공의들을 직접 집으로 찾아간 것은 '송달'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광주일보와 통화한 전남대병원 A전공의는 "오전

에 집을 비워 복귀명령을 전달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A전공의는 복귀 의사를 묻는 질문에 "사직을 한 상태이고, (정부의)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해 복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료 전공의들 움직임을 묻자 A 전공의는 "현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들 개별적 사유로 사직을 하는 것이다 보니 전체적인 움직임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사직서 제출 후 충분히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사법처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사법조치를 한 뒤) 필요하다면 조사는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A 전공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이유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A 전공의는 "저도 필수 의료과중에 하나인 내과에서 수련 중이었는데,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들이 중국에는 필수요료를 고사시킬 것으로 보여 수련을 받아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정부가 의료정책을 낼 때 현장에서 일하는 필수 의료과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에 대해서도 A 전공의는 "(저도) 수련반으면서 느꼈던 피로인데 결국 피로 때문에 사직하게 됐다"면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다. 현재 의료환경,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필수의료 죽이기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심이었다"고 했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미복귀하고 정부가 방침대로 '면허정지 3개월'의 강수를 지속하게 되면 의료붕괴는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결국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환자들의 피해는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의 주동자 위주로 사법처리를 우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방세를 보이고 있던 전공의들이 주동자가 사법처리되면 병원으로 발길을 되돌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 대처가 깊어지자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지쳐가고 제때 진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이날 퇴원한 김모(여·30)씨는 "지난 25일에 입원해 아이를 낳고 오늘 퇴원한다"면서 "전공의가 없어 의사들이 회진 도는 시간이 길어지고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수술도 줄고 있다.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용 혈액을 공급하는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수술이 줄어들면서 혈액 수요도 크게 줄어든 것 같다"며 "매일 수요 변동폭이 커 정확히 몇 퍼센트 줄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8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위한 행진단이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 시민행진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재판이 진행됐던 광주법원 앞 진실마중길까지 행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세월호 참사 아직도 진행 중"... 10주기 맞아 유가족·시민 광주행진

###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등 요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광주에서 '진실, 책임, 생명, 안전한 사회'를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전국시민행진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있는 이들이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가 책임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참사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진단은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사과, 세월호 참사 정보 완전 공개 및 추가 진상조사, 세월호 참사 책임자 엄중 처벌, 4·16 생명안전공원 조속 건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 제정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10·29 이태원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겪었던 권리 침해와 모독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게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세월호 참사 이후의 피해자들, 시민재해와 산업재해 피해자 등 모든 피해자들과 손잡고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 행진 코스에는 2015년 세월호 선원과 현장지휘관 123정장의 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방법원도 포함됐다.

시민행진단 관계자는 "광주 시민들은 세월호 재판 당시 마치 본인들의 일처럼 지지해주고, 격려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날의 길을 다시 걷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세월호 목격지인 제주도를 시작으로 진도, 팽목항,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광주를 거쳐 서울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까지 희생자 304명을 의미하는 304km를 행진한다. /김다인 기자 kdi@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만장일치 합헌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성을 낮추고 차임 상상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가 제한되고 갱신되는 계약의 존속 기간도 2년으로 규정돼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을 제한한)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법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연합뉴스

### 개학 앞둔 초등학교 강당

### 창호 교체작업 60대 추락사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강당 창호 교체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8일 광주북부경찰과 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교체 공사를 하던 A(64)씨가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28일 낮 12시 50분께 결국 숨졌다.

이 공사는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등을 검토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인형뽑기 기계 부수고

### 수백만원 훔친 2인조 검거

담양경찰은 28일 인형뽑기 기계를 부수고 수백만원 현금을 훔쳐 도주한 A(30)·B(30)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2시께 담양군 담양읍 메타프로방스 인근 한 인형뽑기방에 침입해 뽑기 기계를 강구로 부순 뒤 현금 300여만 원을 훔쳤다. A씨가 기계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는 사이 B씨는 땅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가계에서 700여m 떨어진 곳에 주차해 둔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다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